

정부신뢰에 대한 정치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효과 비교와 관계성의 탐색: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이수인**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는 첫째, 경제적 성과 변수와 정치적 성과 변수의 하위변수들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에서의 성별 차이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국민경제 요인들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긍정적이었고, 정치상황과 정치적 자유권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사회권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긍정적이었다. 그에 따라 남성 집단에서는 국민경제와 정치적 자유권이 효과를 나타낸 반면에 여성 집단에서는 회고적 가계경제와 사회권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의 근원에 여성은 사적 영역의 담당자이고 남성은 공적 영역의 담당자라고 하는 남녀의 상이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리하고 있다. 둘째, 정부신뢰에 대해 남녀집단 모두에서 경제적 성과에 비해 정치적 성과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정부기관의 인권보장과 정치 상황 만족에의 요구가 높았다. 인권보장의 효과가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성과보다 민주주의적 제도 성과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을 확인해 준다면, 정치 상황 만족에 대한 요구는 국정 통합과 안정에의 요구 또한 중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경제적 성과, 정치적 성과, 정부신뢰의 구체적 관계성을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정치적 성과 요인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치적 성과 요인이 매개변수라는 것은 경제적 성과 요인들의 특징에 따라 정부신뢰가 달라지기 보다는 정치적 성과 요인들의 정도에 따라 정부신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의미로서 정치적 성과가 보다 중요한 설명력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제어: 정부신뢰, 성별 차이, 정치적 성과, 경제적 성과, 제도성과, 성과 비교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413-H00001).

** 이화여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정치사회학, 종교사회학, 여성사회학이며, 최근에는 아시아 여성들의 종교와 사회운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rghee@hanmail.net).

I. 머리말

정부신뢰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정부의 정당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정부신뢰는 민주주의 정치체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면서 정부신뢰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처럼 정부신뢰가 민주주의체제의 성공적 운영에 중요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이 체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통해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지지를 가늠한다. 서구 민주주의를 대상으로 하는 경험연구들에서는 주로 경제적 요인이 정부신뢰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itrin and Green, 1986; Hetherington, 1998; Hibbing and Theiss-Morse, 2001).

그러나 일련의 학자들은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서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정치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미셸러와 로즈(Mishler and Rose, 1997), 호퍼버트와 클링만(Hoffertbert and Klingemann, 1999) 등은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화된 서구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권위주의체제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동구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개인적 자유, 인권신장과 같은 정치적 요인들이 정부신뢰에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체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종민, 1991)에서도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이 발견되었다.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신뢰 영향요인 가운데 특정 요인의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체제에 대한 지지를 체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성과에 대한 국민의 평가로 인지하는 제도성과론(Mishler and Ross, 2001; 배정현, 2011: 46)의 관점에서 정부신뢰 형성 요인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중 하나는 경제적 성과 요인과 정치적 성과 요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가늠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와 함께 높은 정부신뢰가 일방적으로 민주주의체제의 성공적 운영의 필요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점과 높은 정부신뢰가 반드시 긍정적 차원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다는 점 또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중국 정부의 신뢰(박희봉·이희창, 2005; 배정현, 2011), 우리나라

라나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장수찬, 2002) 문제 등은 높은 정부신뢰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제도와 순선환 관계에 있지 않음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상황은 한편으로는 연구대상이 되는 국가 및 사회의 상황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 요인들의 효과와 인과관계에 대한 해명뿐만 아니라 정부신뢰의 수준에 대한 해석차원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신뢰의 특정 요인에 대한 강조나 복합적 요인들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에서 나아가 특정한 국가 및 사회적 맥락과의 연관 하에 특정한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고 이들 요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의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의 정부신뢰 연구 혹은 대통령 지지에 대한 연구에서 눈에 띄는 현상 중의 하나는 정부신뢰에 대한 경제적 성과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김병규, 이관수, 2009; 김왕식, 2011; 이관수, 2009; 이재철, 2008).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 국민들의 경제적 여망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권혁용, 정한울, 2009; 김용복, 2008; 이재철, 2008)는 사실과 관련이 있으며, 그런 만큼 현실의 반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 경제적 요인이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더라도 정부신뢰의 주요한 영향 요인은 정치사회적 상황과 더불어 변화하기 마련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문우진, 2012).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로 불거진 촛불집회, 4대강 개발, 전직 대통령의 죽음, 언론법 개정, 용산 참사, 등 일련의 정치적 문제들로 인해 반복적으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명박 정부시기의 정부신뢰의 영향 요인으로서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정치적 성과요인이 대등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전히 한국사회가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하나로서 많은 민주적 제도개혁의 과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치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과 대등하게 다루어져야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시기를 대상으로 정부신뢰의 영향 요인으로서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의 효과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자의 입장에서 국내 연구자들의 논의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은 정부신뢰 및 관련요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정부신뢰는 시민들의 민주적 제도への 참여나 민주주의 과정에의 적극적인 관여, 국정운영에의 순기능 등과 관련되므로, 정부신뢰나 그것의 형성원인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은 제도 정치에의 참여나 정치과정에 대한 관여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요인들에 내재되어 있는 성별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신뢰와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젠더관점의 적용은 그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지점들을 제시해준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의 형성요인이나 그 효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별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 요인 및 그 효과에서 발견되는 성별 차이의 문제를 본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정부신뢰의 개념과 정부신뢰 형성 요인

정부신뢰는 “정부에 대하여 국민이 갖는 긍정적 태도” 혹은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다(이승중, 2010: 104). 이와 같이 정부신뢰를 정부에 대해 가지는 국민들의 평가적 정향이라고 보는 점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지만 그 구체적인 개념규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신뢰에 대해 기존 논의들을 검토한 많은 연구자들이 정부신뢰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버(Barber, 1983: 76-78)는 정부신뢰를 능력에 대한 신뢰와 정부의 도덕적 의무이행에 대한 신뢰로 보고 있으며, 헤써링톤(Hetherington, 1998: 791)은 정부신뢰를 “정부가 산출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한 평가 또는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정향”으로 정

의한다. 국내의 연구자들도 정부신뢰는 정부의 능력이라는 기능적 차원과 정부의 도덕성과 의도에 대한 기대라는 윤리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거나(이시원, 1994: 58; 오경민·박홍식, 2002: 117), 정부가 공익이나 복지, 평등유지와 같은 대다수 국민이익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는 일반적 역할 수행에 대한 판단 및 특정집단이 정부가 자신들의 이해에 부응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특정적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로 보고 있다(양건모, 2007: 7). 말하자면 정부신뢰에는 능력이나 산출물에 대한 기능적 평가와 정부의 공익성, 공정성과 같은 윤리적 차원의 평가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 그 자체를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의 영향을 성별 차이의 관점에서 비교해보는데 우선적인 관심이 있으므로 정부신뢰를 정부가 산출하는 각종 산출물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서 기능적 차원에서 정의하기로 한다.

정부신뢰를 형성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의 연구관심에 따라 상이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지역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 유형의 연구들은 독자적인 단위로서 혹은 가족의 성원으로서 개인에게 축적된 사회적 특성들, 말하자면 성, 연령, 소득 등과 같이 유년기 이후 한 개인에게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특성들의 영향을 검토하는 특징을 갖는다. 퍼트남(Putnam, 1993)은 이탈리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신뢰수준을 연구하면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 밖에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주관적인 가치 및 신뢰,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하딘(Hardin, 1990), 헤써링톤(Hetherington, 1998), 아브람슨(Abramson, 1983), 미슬러·로즈(Mishler and Rose, 2001) 등의 연구가 있다(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90에서 재인용).

둘째, 정부신뢰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에 주목하는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개인은 개인으로서의 지위 및 가족단위를 넘어서는 사회적 관계의 담당자이거나 집단의 성원으로서 그것에 내재된 사회제도나 문화요소에 대한 믿음이나 선호 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형성된 심리적 태도나 문화적 성향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따라서 이 관점의 연구들은 정치문화

나 정치적 태도의 형성과 관련된 요인들, 구체적으로 자발적 결사체 참여 (Putnam, 1993; Stolle, 2001; Fukuyama, 1995; 유홍준·홍훈식, 2009)나 정치참여 (Rothstein, 2001; Kasse, 1999;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장수찬, 2002),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일체감(Jacoby, 1994; 2000; 금현섭·백승주, 2010),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Almond and Verba, 1963; Inglehart, 1999; 박희봉·이희창, 2005; 이승중, 2010), 대인신뢰(Brehm and Rahn, 1997; Levi, 1996;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장수찬, 2002; 이수인, 2010) 등이 정부신뢰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둔다.

셋째, 정부의 전문성·효율성과 같은 정부의 능력(Mayer, Davis and Schoorman, 1995; Citrin, 1974; 손호중·채원호, 2005; 이종수, 2001)이나 정부의 정직성·공정성·청렴성 등과 같은 정부의 윤리성(Bultler, 1991; Mayer, Davis and Schoorman, 1999; 손호중·채원호, 2005)처럼 신뢰대상인 정부의 특성을 형성요인으로 들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정부능력과 정부의 윤리성은 정부신뢰의 내용이며 그러한 능력과 윤리성에 따라 정책이 수행되어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통해 정부신뢰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고 보고, 정부능력의 구체적 지표로서의 가시적인 정부성과와 비가시적인 정부 성과가 정부신뢰를 형성하는 원인이라고 보기도 한다. 가시적 정부성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책결과(policy outcomes)나 정책성과(policy outputs)와 같은 제도성과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을 들 수 있다(Miller, 1974; Citrin and Green, 1986; Hibbing and Theiss-Morse, 2001; 김병규·이곤수, 2009; 박종민, 1991; 박종민·배정현, 2007). 정책결과란 광의의 사회적 상황(broad societal conditions)과 관련되는 결과들, 예컨대 경제적 번영과 같은 것들을 일컫는 반면에 정책성과는 시민들의 정책 욕구와 인지된 정책 결정 사이의 일치 여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Hibbing and Theiss-Morse, 2001). 비가시적 정부성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나 절차의 공정성·정당성·투명성을 들 수 있다(Levi, 1998; Hibbing and Theiss-Morse, 2001; 손호중·채원호, 2005; 박종민·배정현, 2007). 이들에 따르면 정책과정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과 조정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데 정부활동의 이러한 차원은 앞에서 말한 정부의 윤리

성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검토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볼 때, 정부의 특성으로서 정부의 능력과 윤리성을 정부신뢰의 내용 차원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수행 결과로서의 성과와 구분한다면, 정부능력에 따른 수행이 가시화된 결과로서 정부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차원의 성과들과 정부정책 수행과정의 윤리성, 도덕성의 표현으로서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의 절차적 성과를 제도적 성과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¹⁾ 이렇게 구분할 경우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지역특성, 사회적 관계나 집단을 통한 사회화 결과로서의 가치와 성향 등은 사회심리(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²⁾

본 연구는 머리말에서 언급했던 문제의식 하에서 제도성과적 차원에 관심을 두고, 제도성과적 요인들 가운데 경제적 성과 요인과 정치적 성과 요인의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제도성과적 요인들에 초점을 둔 국내의 연구들은 경제적 성과를 검토하는 연구들(김왕식, 2011; 이시원, 1994; 김병규·이곤수, 2009; 이곤수, 2009)과 정치사회적 성과의 효과를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들(박종민, 1991; 배정현, 2011)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로서 박종민(1991)의 연구는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정치적 성과, 사회적 성과를 모두 다루고 있으나 권위주의 정부시기를 다루고 있어 민주화 이후 시기의 변화된 상황을 다룰 필요성이 제기된다. 배정현(2011)의 연구는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동시적으로 다룸으로써 국가별 차이로 인한 영향변수들 간의 상쇄효과가 고려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후반시기의 제도성과 요인 가운데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신뢰에 대한 이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고 영향 요인들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자 한다.

1) 이러한 규정은 Mishler and Ross(2001), 배정현(2011), 박종민·배정현(2011)의 논의를 참조한 것이다.

2) 이 입장은 정부신뢰는 유년기부터 발전해 온 사회문화적 소통과 지속적인 단체 활동 등을 통해 형성된 오래된 신념에서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정부신뢰는 대인관계에서 형성된 신뢰의 연장선으로 인식되며 인생의 초년기부터 습득되어 점차적으로 정치적 제도에 주입되는 것으로 본다(김왕식, 2011: 4).

2. 정부신뢰에 대한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의 상대적 효과와 관계성의 탐색

미셸러와 로즈(Mishler and Rose, 1997), 호퍼버트와 클링만(Hofferbert and Klingemann, 1999)의 연구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한 중구 및 동구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지지를 연구했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신뢰에 대한 경제적 성과의 효과가 낮은 반면에 정치적 성과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했다. 민주주의 수준이 높고 체제가 안정적인 서구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경제적 성과가 정부신뢰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지만 이제 막 권위주의체제를 벗어나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경제적 성과보다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정치적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호퍼버트와 클링만(Hofferbert and Klingemann, 1999)에 따르면,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는 정적으로(positively) 연결되어 있어서 가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정치적 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권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경제적 상황의 긍정적 인식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공산주의를 경험한 유럽의 시민들은 독재의 소멸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권 분야의 성과보다는 경제적 성과의 불투명성에 대해 더 많은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정부신뢰를 판단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성과에 비해 정치적 성과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생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적 제도의 미완으로 열망과 실망의 대중동원이 반복되는(최장집, 2010) 한국사회의 경우 정부신뢰에 대해 정치적 성과가 보다 중요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논의한 연구들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정부신뢰에 대해 경제적 성과보다 정치적 성과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줄 뿐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 정부신뢰 간의 구체적 관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상대적 영향력의 중요성이 반드시 인과관계의 우선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진 4개국의 정치적 신뢰를 연구한 뉴튼(Newton, 2006)의 연구는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 정치적 신뢰의 관계는 특정한 사회의 정치경제적, 역사적 상황

과의 접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핀란드는 1980년대 말, 정치적 위기와 거의 동시에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고 이것은 정부신뢰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스웨덴은 조합주의적 모델이 노동법과 유연 생산체계 간의 타협에 실패함으로써 정부가 크게 비판받는 개혁을 억지로 통과시켰고 이것은 정치적 지지의 하락으로 연결되었다. 한마디로 정치 전개상의 문제들이 정치적 지지의 하락을 야기했던 것이다. 뉴질랜드는 장기적인 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야기했고 일본의 경우 경제적 성과문제가 아닌 정치적 부패가 정치적 지지의 하락을 가져왔다. 뉴튼은 이 연구에서 경제적 위기나 정치적 위기 모두 정치적 신뢰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신뢰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상호의존하고 있는 복합체의 통합된 일부분으로서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는 긴밀히 연동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른바, 내생성 문제(endogeneity problem)가 제도성과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내생성 문제는 투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역으로 이들의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즉, 정치적 성향이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문우진, 2012: 194). 핀란드는 경제위기와 정치 위기가 거의 동시에 발생했지만, 핀란드 정치사에서 최초로 중도 정당이 참여하지 않는 연립정부가 성립하고 이 정부가 채택한 급진적 경제프로그램이 문제를 야기했다는 뉴튼의 주장은 정치적 수행이 경제위기를 야기하고 경제위기가 정치적 지지의 하락을 낳았음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특정 요인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또 다른 변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신뢰에 대한 제도성과 요인들 사이의 관계성은 특정한 시점의 정치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결부해서 결정될 문제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후기의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주요 이슈는 경제 성장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을 표방함으로써 당선되었다. 참여정부는 평균 4.42%의 경제성장률이라는 나쁘지 않은 경제성적을 달성했으나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

탈감, 가계부채의 급증, 신용위축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급격한 축소로 인해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과 보수언론의 대립적 관계는 보수언론을 자극해서 부정적인 경제이슈를 쏟아냄으로써 참여정부=경제무능력이라는 등식을 성립시켰다. 한나라당은 ‘경제발전’을 선거 전략으로 쟁점화 했고 정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문우진, 2012: 184; 이완수·심재철, 2007). 따라서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에서 경제적 성과는 인과적 우선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치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는 연구에 추가하여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 사이의 관계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들 사이의 관계성의 탐색은 이론의 검증이나 가설 검증의 수준이 아닌 발견적 차원의 분석임을 밝혀둔다.

3. 정부신뢰에 대한 젠더의 효과

젠더(gender)는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 요인들의 성별 차이에 따른 효과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젠더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의 근거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발견된 선행연구들의 경우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정부를 더 신뢰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몇 십년간 여성들의 핵심적 경력기반이 공적 영역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을 들 수 있다(Christensen and Lægreid, 2005; Edlund, 1999). 여성들은 점점 더 그들의 고용에서 공공 영역에 의지하게 되고 사적 영역보다 공공영역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취업해 있어 공공영역에 대한 지지가 남성들보다 높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공공지출의 증가는 남성들에게 더 높은 세금부담으로 귀결되었고, 그에 따라 남성들에게 공공영역 제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정부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Christensen and Lægreid, 2005). 이와 유사하게 불평등이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성과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 재분배정책의 열렬한 지지자들이라는 논의가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복지국가에 의해 실행된 재분배정책을 놓고 새로

운 사회균열이 발생하면서 수혜를 받는 집단은 정부를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정부를 지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Edlund, 1999). 이러한 논리는 남녀의 태도차이를 궁극적으로 고용구조라는 남녀의 사회적 위치의 차이에서 찾아야 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의 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젠더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언급하지는 않았더라도 사회적 연결망이나 결사체 활동이 젠더에 따라 불평등하게 구조화되어 있어서 사회자본에서 젠더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들을 찾아 볼 수 있다(Lin, 2000; Mayoux, 2001). 이들의 논의는 사회적 연결망이나 결사체 활동이 정치참여로 연결되면서 정부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젠더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거를 설명해주는 연구들로 볼 수 있다. 메이요(Mayoux, 2001)는 사회자본이 특정한 사회적 관계망 안에 포함된 구성원들에게는 공적 재화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것에 대한 분배가 성별이나 계층에 따라 균등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린(Lin, 2000) 역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규모가 크고 핵심적인 집단에 속해 있으며 직업적, 업무적으로 가용 가능성이 많은 조직에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은 가족이나 친척 등과 같은 동질집단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사회자본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사체 가입의 차이는 자녀양육이 여성의 일이라는 사회적 규범 때문이다. 자녀양육은 여성들에게 정보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나 종류에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여성들이 가족이나 친밀한 동질적 관계의 네트워크에 위치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이수인, 2010).

한편, 정부신뢰에 대한 정치적 성과 요인의 효과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의 경우 서구사회를 대상으로 한 경험연구들에서는 주로 남성보다 여성이 정부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Abramson, 1983; Christensen and Læg Reid, 2005). 복지체계가 진전된 서구사회의 경우 여성들이 주로 고용되는 부문이 공공영역이며, 정부복지 혜택의 수혜자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첫째 유형의 이론적 논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의 경우 정부신뢰와 성별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정부를 신뢰한다는 연구들(김지희, 2006;

박희봉, 이희창, 조연상, 2003)과 여성이 남성보다 정부신뢰가 낮다는 연구(이수인, 2010), 성별 변수가 국가제도 신뢰에 별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박종민·김왕식, 2006)이 공존한다. 이처럼 한국사회를 대상으로 하면서 정치적 성과 요인을 주요변수로 포함하는 경험연구들의 경우 정부신뢰에 대한 성별 효과가 일관되지 않은 가운데 대체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정부신뢰가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정부신뢰의 영향 요인으로서 경제적 성과를 주요한 변수로 포함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의 경우, 서구사회나 우리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에서 성별 변수가 분석모형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Kinder and Kiewiet, 1979; Feldman, 1982; 박종민, 1991; 이시원, 1994; 배정현, 2011). 또 성별변수가 분석모형에 포함되었지만 정부신뢰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왕식, 2011; 김병규·이곤수, 2009; 이곤수, 2009; 박종민·배정현, 2011). 이러한 현상은 성별에 따라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효과들이 상쇄됨으로써 성별효과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을 분리하여 성별에 따라 정치적 성과 요인과 경제적 성과 요인이 정부신뢰에 맺는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선미(2004)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자원결사체 참여가 순수하게 자원적이지 않고 구조적으로 성별로 분리되어 있다. 즉 자원결사체 유형이 성별로 분리되어 있는데, 공론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 있는 결사체 유형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현저히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물론 여성이 양육담당자라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처럼 자원결사체에의 참여와 활동이 성별로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과 한국사회는 결사체 참여가 활발하고 정치참여가 활발할수록 정부신뢰가 낮아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발생한다는 현실(장수찬, 2002)을 겹쳐보면 대체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높은 정부신뢰를 드러내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신뢰에서의 젠더 차이는 그것의 기능과 효과의 차이에 대한 해명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차이에 대해서도 주목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 영향 요인들의 효과에서 성별에 따른 집단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성별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젠

더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정부신뢰의 형성 방식 및 젠더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정부신뢰 관련 쟁점들에 대한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틈새를 메워주는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4. 연구문제의 설정

이제까지 검토한 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연구문제를 구성해보기로 한다. 첫째, 정부신뢰, 경제적 성과, 정치적 성과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토해본다. 둘째,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의 어떤 측면들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지, 이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검토해 본다. 이 작업은 특히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 변수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정부신뢰, 경제적 성과, 정치적 성과 사이의 관계성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이 변수들 사이의 인과연쇄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기라고 하는 특정한 정치사회적 맥락과의 연계 속에서 진행된다. 세 번째 연구문제 역시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 요인들과 그 효과의 성별 차이에 대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인과연쇄에서의 성별 차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모형에서 나이, 학력, 소득이라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계층의식 및 정당일체감이라는 사회심리적 변수들이 통제변수로 설정된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나 사회심리적 변수들과 정부신뢰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이유는 객관적 지위로부터 초래되는 주관적 심리 상태가 정부신뢰와 같은 정치적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Shepelak, 1989; 전성표, 2006).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수들은 가치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³⁾ 종속 변수는 물론 독립변수인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제변수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3) 예컨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정치 행정체계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지므로, 공공서비스가 조직되는 방식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신뢰가 촉진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정부에 대한 많은 지식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산출하고, 그러한 규범적 태도가 높은 수준의 교육으로 갖게 된 인지적 측면보다 더 중요하게 될 수도 있다(Christensen and Lægread, 2005).

Ⅲ. 연구 자료와 측정도구

1. 자료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종합사회조사, 2011」이다. 이 자료는 2003년부터 매년 시행된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제9차년도 조사로서 다단계지역확률표본추출 (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에 의거해 수집되었다. 수집된 총사례수가 1535사례이다. 본 자료의 표본추출방법은 한국사회자료과학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기술은 생략하기로 한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이 689명(44.89%), 여성이 846명(55.11%)으로서 2010년도 기준 한국인구의 성비율(남성, 49.68%, 여성 50.32%)보다(통계청 홈페이지 인구센스 자료) 여성이 약간 많이 표집되었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40세였고, 30대(23.3%)와 40대(23%)가 가장 많이 포함되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13.2%, 중학교 졸업이 7.6%, 고등학교 졸업이 29.6%, 전문대 졸업이 12.9%, 대학교 졸업이 30.3%, 대학원 졸업 이상이 6.2%였다. 취업자는 59.6%(915명)이고 미취업자가 40.4%(620명)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총소득은 50만원미만 8.7%, 50~149만원 9.9%, 150~249만원이 14.4%, 250~349만원이 16.1%, 350~449만원이 15.5%, 450~549만원이 13.8%, 550~649만원 6.1%, 650~749만원 5.6%, 750~849만원 2.8%, 850~949만원 1.4%, 950만원 이상이 5.6%였다.

2. 변수의 구성

본 논문의 종속변수는 정부신뢰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것은 통치체제로서의 정부신뢰가 아니라 집권정부에 대한 신뢰이다. 주기적·경쟁적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정부체제와 집권정부간에 명확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치체제가 아닌 집권정부에 대한 신뢰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김병규·이곤수, 2009: 4). 엄밀하게 본다면 주

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대통령을 선두로 하는 정치적 집권담당자들을 지칭하는 집권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관료집단을 지칭하는 행정부 신뢰는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활동이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정치적 태도의 대상으로 논의되는 정부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적 집권 담당집단과 행정활동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경력직 공무원 집단이 포함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정부신뢰는 직업관료 집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신뢰 개념과 대통령과 집권당구에 대한 신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병규, 이곤수, 2009: 4). 따라서 본 연구는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담당자들에 대한 신뢰와 중앙정부 담당자들에 신뢰를 통해 정부신뢰를 구성하였다.

제도성과적 요인으로서 경제적 성과는 정부신뢰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인정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입장이 나뉜다. 경제적 여건의 평가대상으로서 개인 또는 가구 경제를 강조하는 입장과 국가 경제를 강조하는 상이한 입장이 존재하며, 경제적 여건에 대한 판단에서 과거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중요한지 아니면 장래 경제에 관한 전망적 판단이 중요한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린다(이시원, 1994; 이현우, 1998; 정한울, 2007). 국내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과거의 경제실적에 대한 회고적 판단보다는 미래에 대한 전망적 판단이, 개인적 경제여건 변화보다는 국가경제에 대한 판단이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한다(이시원, 1994).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적 경제여건이나 회고적 판단의 영향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김병규, 이곤수, 2009: 8), 현재의 가계경제만족과 가계경제에 대한 회고적 판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적 성과변수가 정부신뢰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연구결과 또한 존재한다(김왕식, 2011).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제에 대한 현재의 만족도와 미래의 전망, 가계경제에 대한 현재의 만족도와 미래 가계경제의 전망, 가계경제에 대한 회고적 판단을 경제적 성과변수로 사용하였다. 국가경제의 경우 2011년의 KGSS자료에서 회고적 판단 항목이 누락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

정치적 성과에는 정부가 공정한 정부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정부서비스와 정치참여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치적 제도나 정책

마련 차원의 정치적 성과(Stolle and Hooghe, 2003; 배정현, 2011)와 대통령의 국정통합 및 조정 차원의 정치적 성과 차원이 모두 존재한다. 강한 대통령제를 가진 국가로서 현실적합성의 차원에서 정치적 성과를 정의하면 집권정부의 정치적 성과란 대통령의 정치적 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란 국가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대표권, 국가 수호권, 헌법기관구성권, 국정의 통합 및 조정권이다(차강진, 2002). 오늘날에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도 정치적 지도 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조한상, 2009). 국내 정치와 관련해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의 주요 직무로 생각하는 것은 국정의 통합 및 조정권이다. 이것은 다양한 정치세력 간, 정부부처 간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통치권의 차원으로서 구체적인 정책성과 구별되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차원이다. 본 연구는 정부를 청와대 담당자들과 중앙 행정부처의 담당자들로 규정했으므로 정치적 성과의 두 차원이 모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치적 성과는 대통령의 직무성과 차원인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 미래의 정치에 대한 전망과 정부제도나 정책 차원의 성과인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⁴⁾ 정치적 자유권의 인정 정도, 사회권의 인정 정도를 정치적 성과 변수로 설정하였다. 최근 우리사회는 복지제도의 구성과 복지권의 인정 정도를 놓고 치열한 정치적 대결과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사회권을 정치적 성과의 한 요소로 보는 것이 현실적합성이 있을 것이다.

정부신뢰를 형성하는 사회심리적 요인 가운데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는 것은 정당일체감과 계층의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당들을 보수, 중도, 진보의 3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계층의식은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하여 주관적인 귀속감을 점검하였다. 응답자들의 사회적 배경을 점검하

4)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에 포함된 기관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이다. 정부신뢰를 청와대와 중앙정부부처로 구성하였으므로 중앙부처와 더불어 청와대를 포함하였고 인권보장노력의 바로미터로 간주되는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이며 이 기관의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므로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나 인권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까지를 포함해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을 구성하였다.

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나이, 학력, 소득, 취업여부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모두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수의 구성과 내용

변수유형	변수명	변수의 내용	척 도	
종속변수	정부신뢰	청와대 신뢰 중앙 정부 부처 신뢰	3점 척도, 2문항(남: $\alpha=.67$, 여: $\alpha=.685$) ①매우 신뢰 ②다소 신뢰 ③ 신뢰 없음	
독립 변수	경제적 성과 변수	국가경제만족도	한국 경제 상황에의 만족 정도	5점 척도(1문항) ①훨씬 좋아질 것 ~ ⑤훨씬 나빠질 것
		미래 국가경제	앞으로 한국 경제에의 전망	5점 척도(1문항) ①훨씬 좋아질 것 ~ ⑤훨씬 나빠질 것
		가계경제만족도	귀댁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 정도	5점 척도(1문항) ①훨씬 좋아질 것 ~ ⑤훨씬 나빠질 것
		미래 가계경제	앞으로 10년 이내 가계경제 전망	5점 척도(1문항) ①상당히 좋아질 것 ~ ⑤상당히 나빠질 것
		회고적 가계경제	지난 몇 년 동안 가계 경제상태 판단	5점 척도(1문항) ①상당히 좋아졌다 ~ ⑤상당히 나빠졌다
	정치적 성과 변수	정치 만족도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 정도	5점 척도(1문항) ①매우 만족 ~ ⑤매우 불만족
		향후 정치 전망	미래 한국 정치 상황	5점 척도(1문항) ①훨씬 좋아질 것 ~ ⑤훨씬 나빠질 것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	7개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에 대한 평가	5점 척도, 11문항(남: $\alpha=.873$, 여: $\alpha=.872$) ①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⑤매우 부정적으로 평가
		사회권	복지권, 건강권, 교육권에 대한 인식	5점 척도, 3문항(남: $\alpha=.795$, 여: $\alpha=.767$) ①매우 존중 ~ ⑤매우 제한
		정치적 자유권	집회 및 결사 자유	5점 척도(1문항) ①매우 존중 ~ ⑤매우 제한
통제 변수	사회심리 변수	계층의식	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	10점 척도(1문항) ①최하층 ~ ⑩최상층
		선호정당	지지하는 정당	3점 척도(1문항) ①보수정당(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②중도정당(민주당, 창조한국당) ③진보정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 인구학적 변수	나이	만으로 몇 세인지 질문	7점 척도(1문항) ①10대 ② 20대~ ⑦70대
		학력	어느 학교까지 다녔는지 질문	6점 척도(1문항) ①초등학교이하 ②중학교 ③고등학교 ④전문대 ⑤4년제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취업여부	취업여부 질문	명목척도 ①취업 ②미취업	
	총소득	가계총소득	11점 척도(1문항) ①마이뉴스~50만원 미만 ②50~149만원 ③150~249만원 ~⑪950만원 이상	

IV. 분석결과

1. 정부신뢰 및 주요 변수들의 성별 차이

정부신뢰와 그것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수들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주요 변수들의 성별 차이

변수	남 성 집 단		여 성 집 단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부신뢰	4.61	1.053	4.72	1.074	-1.785
국가경제만족도	3.20	1.087	3.44	1.058	-4.289**
미래 국가경제	2.40	.934	2.59	.970	-3.801***
가계경제만족도	3.04	1.104	3.13	1.152	-1.581
미래 가계경제	2.50	.988	2.54	.939	-.777
회고적 가계경제	2.97	.963	3.08	.961	-2.743**
정치만족도	3.77	1.017	3.62	.990	2.717**
향후 정치 전망	2.55	.867	2.59	.844	-1.008
공공기관 인권보장 노력	32.583	6.840	33.206	6.132	-1.762
사회권	7.838	2.125	8.145	2.082	-2.836**
정치적 자유권	3.13	.963	3.33	.886	-4.214***
계층의식	4.95	1.697	4.63	1.669	3.651***
선호정당	1.62	.727	.635	.702	-.228
나이	3.95	1.583	4.06	1.659	-1.360
학력	3.89	1.360	3.35	1.520	6.943***
총소득	5.13	2.556	4.62	2.60	3.676***

주: *p<.05, **p<.01, ***p<.001

정부신뢰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영향 요인들에서는 대체로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적 성과 변수의 하위변수 가운데 가계 경제 만족도와 향후 가계경제 전망과 정치적 성과 가운데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을 제외한 영향 요인들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 평균값 3.77, 여자 평균값 3.62($t=2.717, p=.007$)로서 남성들이 약간 더 불만족스러워했다. 사회권, 정치적 자유권에 대해서는 모두 여성들의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아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각각의 권리가 더 제한적이라고 인식했다. 공공기관의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해선 남녀 모두 평균적으로 보통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래의 정치전망과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에 대한 인식을 제외한 정치적 성과 변수들은 대체로 여성들이 좀 더 불만족하는 가운데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에서만 남성들이 불만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가경제 만족도의 경우 남자 평균값 3.20, 여자 평균값 3.44($t=-4.289, p=.000$)로 남성들이 약간 더 만족하는 편에 가까웠고, 미래 경제전망에서도 남성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국가 경제에 대한 만족도와 전망은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약간 더 만족스럽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계경제 관련 변수들에서는 회고적 가계경제 판단에서만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회고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가운데서는 연령만이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교육과 소득에서는 남성 집단의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았다. 취업여부는 남성의 75.2%, 여성의 46.9%가 취업상태로서 성별 차이가 유의했다($\chi^2=125.912, df=1, p=.000$).⁵⁾ 선호정당에선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계층의식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계층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염두에 두고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정부신뢰의 값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영향요인들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차이가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에서의 성별 차이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5) t 검증 결과표에 취업여부는 들어가 있지 않다. 분석에 포함된 변수 중 유일하게 취업여부만이 명목변수이므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2. 정부신뢰에 대한 관련 변수들의 상관관계

다중 회귀분석에 앞서 사회인구학적 변수, 계층의식과 선호정당, 정치적 성과 변수, 경제적 성과 변수, 정부신뢰 간의 상관관계를 성별로 살펴보았다.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 수	집단	1	2	3	4	5	6	7	8	9	10	11
1 정부신뢰	남	1										
	녀	1										
2 국가경제	남	.314**	1									
	녀	.304**	1									
3 미래국가경제	남	.142**	.375**	1								
	녀	.169**	.334**	1								
4 가계만족	남	.141**	.285**	.135**	1							
	녀	.134**	.398**	.227**	1							
5 미래가계경제	남	.045	.121**	.107**	.185**	1						
	녀	.018	.093**	.192**	.170**	1						
6 회고적가계경제	남	.148**	.170**	.111**	.397**	.364**	1					
	녀	.033	.224**	.172**	.361**	.279**	1					
7 정치만족도	남	.396**	.216**	.216**	.216**	.014	.048	1				
	녀	.375**	.424**	.206**	.190**	-.006	.124**	1				
8 향후정치전망	남	.211**	.200**	.337**	.083*	.089*	.041	.278**	1			
	녀	.270**	.292**	.484**	.220**	.125**	.166**	.251**	1			
9 공공기관인권보장	남	.426**	.319**	.218**	.210**	.075	.181**	.161**	.161**	1		
	녀	.384**	.261**	.228**	.128**	.068	.069	.260**	.214**	1		
10 사회권	남	.206**	.234**	.150**	.096*	.049	.131**	.165**	.089*	.411**	1	
	녀	.152**	.159**	.094**	.055	.017	.043	.133**	.130**	.394**	1	
11 정치적자유권	남	.256**	.211**	.119**	.078*	.020	.035	.228**	.140**	.325**	.446**	1
	녀	.274**	.211**	.078*	.101**	.024	.022	.222**	.149**	.336**	.354**	1

주: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 *상관계수는 .05수준(양쪽)에서 유의

남성들의 경우 정치적 성과 변수의 모든 하위변수들과 정부신뢰가 상관관계를 드러내고 있다($r=.206\sim r=.426$). 경제적 성과 변수의 경우는 미래 가계경제 전망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수들과 정부신뢰 사이에 상관관계($r=.141\sim r=.314$)를 드러내고 있으나 정치적 성과변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관성의 정도가 낮다. 여성들의 경우 정부성과 변수들과 정부신뢰 간의 상관관계 유형이 대체로 남성 집단과 유사하나 회고적 가계경제 전망과 미래 가계 전망 모두에서 정부신뢰와 유의한 상관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경제적 성과변수의 경우 대체로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에 비해 강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선호정당·계층의식과 정부신뢰 간에도 남녀집단 모두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진보정당을 선호할수록 정부신뢰가 하락하고,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주관적으로 상층에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이명박 정부를 신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경우 남성 집단에서는 나이만이 정부신뢰와 유의한 상관성을 드러내는데 비해($r=-.120, p=.01$), 여성 집단은 나이($r=-.224, p=.01$)와 교육($r=.191, p=.01$)이 정부신뢰와 상관성을 보였다. 나이가 들수록 정부를 더 신뢰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낮아졌다. 교육수준과 정부신뢰의 부적(negative) 상관성은 정부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정부신뢰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구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정부신뢰와 교육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행정체계 일반에 대한 이해가 보다 많을 것이고, 이는 정부신뢰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배귀희·임승후, 2009: 69).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정치참여가 높은 사람들이 정부불신이 더 높는데, 이는 미성숙한 민주주의 하에서는 정치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므로 정치과정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정치에 참여할수록, 정치과정의 왜곡을 인지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장수찬, 2002: 98, 105). 여성 집단에서만 교육과 정부신뢰의 부적 상관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뒤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전체적으로 정부신뢰와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경제적 성과보다는 정치적 성과의 상관성이 보다 뚜렷하고, 성별 차이 또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의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 비교와 성별 차이 비교

상관분석 결과 $r=.80$ 이 넘는 것이 없고, 분산팽창계수(IVF)가 남성 집단 1.21~1.53, 여성 집단 1.27~2.17로 10이상이 되는 것이 없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으므로, 다중회귀분석을 남녀집단별로 시행하였다. 정부신뢰에 대한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경제적 성과 변수와 정치적 성과 변수들을 별개로 포함하는 분석모형들을 제시한 후, 이 변수들을 모두 동시에 투입하여 영향 요인들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성별 분석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정 부 신 뢰		정 부 신 뢰		정 부 신 뢰		정 부 신 뢰	
		모형		(표준화 계수 β)		(표준화 계수 β)		(표준화 계수 β)		(표준화 계수 β)	
		4a1	4a2	4b1	4b2	4c1	4c2	4d1	4d2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통 제 변 수	나 이	-.001	-.114	.023	-.082	.008	-.093	.020	-.066		
	학 력	-.053	.049	.048	.052	.032	.020	.046	.027		
	취업여부	-.299***	.009	-.267***	.009	-.150***	.002	-.170***	.012		
	총소득	.043	.057	-.077	.075	.057	.117*	.064	.104*		
	계층의식	-.122*	-.167***	-.077	-.143**	-.113*	-.117*	-.118*	-.143**		
	선호정당	.207***	.198***	.155***	.172***	.099*	.099*	.086	.094*		
경 제 적 성 과	국가경제만족도			.286***	.211***			.152*	.082		
	미래 국가경제			-.034	.102*			-.079	-.001		
	가계경제만족도			.028	.068			-.063	.046		
성 과	미래 가계경제			-.055	-.067			-.028	-.080		
	회고적 가계전망			.071	-.068			.103*	-.107*		
정 치 적 성 과	정치상황 만족도					.271***	.253***	.232***	.235***		
	향후 정치 전망					.009	.143***	.023	.158*		
성 과	공공기관 인권보장 정도					.236***	.266***	.230***	.237***		
	사회권					-.048	-.121**	-.074	-.110*		
	정치적 자유권					.103*	.073	.109*	.067		
R ²		.173	.108	.255	.190	.328	.317	.353	.341		
F		14.760 ***	9.083 ***	12.749 ***	9.161 ***	17.379 ***	17.145 ***	12.998 ***	12.593 ***		

주: *p<.05, **p<.01, ***p<.001

본 연구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정부신뢰에 대한 각 변수들의 영향력은 비표준화회귀계수가 아닌 표준화회귀계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여러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려면 모든 독립변수들의 단위와 분포를 통일시켜주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비표준화회귀계수(b)를 변화시킨 것이 표준화회귀계수(β)이다(김태근, 2006).

먼저 남성 집단의 분석결과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변수이자 통제변수인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사회심리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 경제적 성과 변수들을 투입한 모형(4b1)의 설명력은 25.6%였다. 기본모형에서 나타났던 계층의식의 효과는 사라지고 국가경제 만족도→취업여부→정당선호의 순서로 효과를 나타냈다. 기본변수들을 통제한 후 정치적 성과 변수들을 추가한 4c1 모형의 설명력은 32.8%였고, 정치상황 만족도→공공기관의 인권 보장→취업여부→계층의식→정치적 자유권→정당선호의 순서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기본모형에 비추어볼 때, 정치적 성과변수들의 효과가 경제적 성과변수들의 효과보다 월등하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변수들이 투입된 4d1 모형에서는 정치상황 만족도·공공기관의 인권보장→취업여부→국가경제 만족도→계층의식→정치적 자유권→회고적 가계 전망의 순서로 영향력이 나타나 대체로 정치적 성과 변수들이 정부신뢰에 강한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정도의 효과는 $\beta=.230$, 정치상황 만족도는 $\beta=.232$ 로서 두 변수의 영향력은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모형을 통해, 정치적 성과 변수는 물론 통제변수나 경제적 성과 변수 모두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정부신뢰에 대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집단을 살펴보면 기본변수들을 통제한 후, 경제적 성과 변수가 고려된 4b2모형의 설명력은 19%이고, 국가경제 만족도→선호정당→계층의식→미래 국가경제 전망의 순서로 영향력을 드러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취업 여부가 남성 집단에서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t검증에서 드러났던 성별 취업상태의 차이가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를 연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분석 결과는 취업상태로 이동할 때, 정부신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

로 예상할 수 있는 것과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으므로 해명이 필요한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통제변수에 정치적 성과변수가 포함된 모형(4c2)의 설명력은 31.7%로서 공공기관의 인권보장→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향후의 정치 전망→사회권 보장→계층의식 및 선호 정당의 순서로 효과가 나타났다. 남성 집단에서 나타났던 정치적 자유권의 효과가 사라지고 사회권의 효과가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통제변수와 함께 모든 독립변수들을 고려한 모형(4d2)의 설명력은 34.1%이며, 공공기관의 인권 보장→정치상황 만족도→가계에 대한 회고적 전망→계층의식→향후의 정치 전망→계층의식→사회권 보장→회고적 가계전망→총소득→선호정당의 순서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여성 집단의 경우 정치적 성과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회고적 가계전망을 제외한 경제적 성과변수들의 효과가 사라진 점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정치적 성과 변수들의 영향으로 국가 경제 관련 변수들의 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성 집단에서만 나타난 향후 정치 전망의 효과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미래에 대한 전망은 회고적 판단에 비해 직접적 경험에 의거하기보다 정보와 직관에 의존해야하므로 회고적 판단보다 더 주관적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여성 집단의 경우 교육수준이 남성들보다 낮으므로 남성들에 비해 더 주관적인 평가자라고 볼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효과에서도 성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부터는 모형 4d1과 모형 4d2를 토대로 정부신뢰에 대한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고 토론거리를 개진해 보기로 한다. 첫째, 남녀집단 모두 경제적 성과에 비해 정치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녀집단 모두에서 공공기관의 인권 보장 노력과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확인되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정부신뢰에 대해 더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은 경제적 성과가 아닌 정치적 성과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성과보다 정치적 성과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Mishler & Rose, 1997; Hofferbert and Klingemann, 1999; 박종민, 1991)에 부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의 슬로건을 통해 당선되었

고 국민들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바람도 일차적으로 경제회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강원택, 2007; 김용복, 2008), 의외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지지 또는 정부신뢰는 엘리트들과 언론의 비판, 정치적 스캔들, 정치적 드라마, 국가 위기 등과 같은 국가의 정치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재임기간 등에 따라 변화한다(문우진, 2012; 이상훈, 2005; 이후중, 2009; 한귀영, 2011)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고소영’ 내각 문제로 정치적 비판을 초래한 후 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집회를 야기했고, 그 이후 언론법의 강행, 4대강 개발,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 전임 대통령의 죽음, 세종시 문제, 민간인 사찰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정치적 비판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상황의 후퇴, 표현자유억의 억압, 사회적 기본권 후퇴, 국민과의 소통 부재 등의 문제가 줄곧 시민사회에 의해 제기되었다(김배원, 2013; 박영선, 2010).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의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정치적 성과가 정부신뢰의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이 남녀 모두에서 정부신뢰의 가장 큰 영향요인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기초로서 인권보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그 만큼 확고함을 보여준다.

가능한 또 다른 해석은 선행 연구들이 인권보장 같은 민주적 체제 유지에 핵심적인 요인들이나 정치상황 만족도와 같은 중요한 정치적 성과 요인들을 간과함으로써 정치적 성과 요인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 인권보장 노력과 정치상황 만족도는 남녀 집단 모두에서 대등하게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서 경제적 성과 요인들의 효과를 크게 앞선다. 그만큼 한국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인들에 대한 지지와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요구가 팽팽하게 양립하며, 이 욕구는 경제적 욕구를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2011년에만 국한된 것인지 다른 시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년도의 KGSS 자료를 검토하였다. KGSS 2008년의 자료로 다중회귀분석을 할 경우, 정치상황 만족도($\beta=.271$)→향후 정치 전망($\beta=.118$)→국가경제 만족도($\beta=.100$)→국가경제 전망($\beta=.090$)의 순서로 정부신뢰를 설

명하고 있다($R^2=.173$). 정치상황 만족도와 정치 전망이 경제적 성과 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보인다. 2009년, 2010년 자료의 경우 국가경제 만족도 문항이 누락되어 있다. 2010년 자료는 국가경제 만족도가 누락되어 있지만, 본 연구의 또 다른 중요 설명변수인 정치제도 혹은 정부정책의 성과인 정치적 성과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분석결과, 정책결과로서의 정치적 성과($\beta=.313$)→정치상황 만족도($\beta=.198$)→국가경제 전망($\beta=.072$)→향후 정치 전망($\beta=.059$)의 순서로 정부신뢰를 설명하였다($R^2=.241$, $F=70.469$, $p=.000$).⁶⁾ 이 분석에서 보면 정부정책 결과로서의 정치적 성과 요인의 효과가 탁월하므로 적어도 정부신뢰에 대해 정치적 성과 변수가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점은 제시할 수 있으며, 정치상황 만족도 역시 매우 비중 있는 정부신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KGSS 분석결과들은 대통령의 직무성과 특성이 강한 정치상황 만족도 변수가 정치제도 혹은 정책 성과와 더불어 중요한 정치적 성과 요인이 되며 국가경제 만족도를 상회하거나 적어도 그에 필적할 만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공공기관의 인권보장과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와 공정사회나 민주적 체제 안정과 관련된 정치적 성과 요인이 정치상황 만족도와 대등하게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정부신뢰 영향 요인으로서 경제적 성과는 인권보장과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인과 국정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한계선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⁷⁾

둘째, 경제적 성과에서의 성별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남성 집단은 경제적 성과 변수 가운데 국가경제 만족도와 회고적 가계경제 전망이 효과를 보였던 반면에 여성 집단은 국가경제 차원의 효과는 사라지고 가계경제에 대한 회고적 판단

6) 여기에서의 정치적 성과 요인은 현 정권의 빈부격차 해소, 노사갈등 해소, 부정부패 방지, 지역갈등 해소, 과세 공정성 정책을 평가하는 문항들을 합산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회적 성과로 간주될 수 있는 문항들도 있으나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정책의 구상과 실행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예컨대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성과에 포함하였다.

7) 2008년의 촛불집회나 대운하 반대운동, 4대강 개발에 대한 지속적 비판 등은 모두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만이 정부신뢰와 부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흥미 있는 점은 남성들의 경우 회고적 가계경제 인식이 나쁠수록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데 여성들은 회고적 가계경제 인식이 좋을수록 정부를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 먼저 회고적 가계 전망에 대한 응답분포를 보면 ‘상당히 좋아졌다’~‘차이가 거의 없다’는 구간에 머무르는 여성들이 69.4%에 달하며,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회고적 가계상태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여성 집단을 회고적 가계상태에 대한 인식과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4개의 집단으로 구성하고 집단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집단은 회고적 가계전망에의 인식 점수가 ‘상당히 좋아졌다’~‘차이가 거의 없다’에 해당하면서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집단(A), 전문대 이상인 집단(B)과 회고적 가계전망 인식이 ‘조금 나빠졌다’~‘상당히 나빠졌다’에 해당하면서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하인 집단(C)과 전문대 이상인 집단(D)으로 분류하였다. 경제적 성과 요인 변수 5개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오직 A집단에서만 한국경제에 대한 만족($\beta = .219$)과 더불어 회고적 가계 전망 인식($\beta = -.140$)이 부적 효과를 드러냈다($R^2 = .097$, $F = 5.225$, $p = .000$). 같은 조건으로 남성 집단을 분석했을 때, 각각의 모형들에서 국가경제 만족도나 국가경제 전망만이 효과가 있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지난 몇 년간 가계경제가 별 변동이 없거나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이가 다수인 집단에 속하면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인 경우에만, 가계경제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인식될 경우, 다른 대안을 찾기 보다는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진 대통령이 수반인 현재의 정부에 대해 더욱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남성 집단의 경우 모든 유형의 집단에서 회고적 가계경제 인식이나 기타 가계경제 관련 변수가 정부신뢰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 집단에서도 회고적 가계전망이 정부신뢰와 관계가 없었던 점을 염두에 두면,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경우 현실에 대한 인식 및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의 모색에서 인지적 왜곡이 개입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낮은 남성들의 경우에 가계경제의 회고적 판단이 정부신뢰와 관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에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모두 돌릴 수는 없다. 주목할 점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보수정당 지지자가 유의

하게 많다는 점이다. t검증에 따르면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학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보수정당 선호가 높다. 물론 교육과 정당선호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 남성 집단은 $\chi^2=12.004(df=5, p=.035)$, 여성 집단은 $\chi^2=17.178(df=5, p=.004)$ 로서 양 집단 모두에서 교육수준에 따라 정당선호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람다계수(λ)가 여성 집단 0.136, 남성 집단 0.076으로서 양 변인들 간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여성 집단이다.⁸⁾ 남성들의 경우 정당 선호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여성들에 비해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남성 집단의 경우, 다른 변수들이 모두 통제될 때(4d1), 정당변수의 효과가 사라지고,⁹⁾ 현재나 과거 경험에 근거한 평가보다 좀 더 주관적 판단인 향후 정치 전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남성들이 더 세련된 평가자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여성 집단에서만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남성들과는 다른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가 자리한다. 본 분석에 따르면 남성 집단에서만 취업여부가 유의미한 변수로서, 취업자가 아닌 미취업자일수록 정부를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소 기대와 다른 분석결과는 취업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남성 집단의 경우, 취업자 가운데 48.5%(334명)가 피고용자이고 자영업자가 26.7%(184명)이며, 자영업자들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자가 63.6%로서 자영업자들 가운데 다수가 영세자영업자로 추정된다. 여기에 피고용자들(334명) 가운데 14.4%(48명)가 임시직, 일용직에 머무르고 있어, 취업자중 영세자영업자와 비상용직이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존

8) 정당선호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A집단을 다시 보수정당과 비보수정당으로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수정당 집단에서 회고적 가계만족도의 효과($\beta=-.171$)가 약간 증대하고 국민경제만족도의 효과($\beta=.179$)는 약간 감소하였다($R^2=.114, F=4.239$). 비보수 정당 집단은 국민경제 만족도($\beta=.239$), 미래 가계경제 전망($\beta=-.161$)이 효과를 나타냈다($R^2=.130, f=4.825$). 이러한 결과는 회고적 가계전망의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는 회고적 가계상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교육수준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교육수준 효과는 정당선호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회고적 가계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화할 때, 정부를 더 신뢰하는 여성은 교육수준이 낮으면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여성들인 것이다.

9) 정당변수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은 현재의 집권당(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정당이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KGSS 2009년 자료를 사용한 선행연구(이수인, 2012)는 상용직의 55.7%가 비정규직임을 보여주고 있다.¹⁰⁾ 본 논문의 자료 분석에서 드러난 영세자영업자와 임시직, 일용직의 무시할 수 없는 비중 및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취업자 중 다수가 질이 낮은 직업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경우 근로를 하면서 분배불공정성을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취업자일수록 정부신뢰가 더 낮아진다. 고용지위는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이수인, 2012),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좋지 않은 일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남성들의 경우 대다수가 취업을 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질이 나쁜 근로경험을 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남성들의 경우 정치적 태도에 대한 교육수준이나 정당선호의 효과가 취업경험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 표집된 여성들(846명) 가운데 미취업자가 53.1%(449명)이다. 미취업의 첫 번째 사유는 가사 및 돌봄 노동으로서 전체 미취업자 가운데 46.7%(210명)를 차지한다. 두 번째 사유는 노령으로서 23.3%(105명), 세 번째 사유는 학업으로서 12.2%(55명)이다. 이에 비해 남성 미취업자들(689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는 학업으로서 24.8%(171명)이고, 두 번째 사유가 노령으로 22%(38명), 세 번째 사유는 퇴직 및 은퇴로서 18.1%(31명)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우선적인 사회적 장소가 사적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며, 낮은 교육수준과 가사와 돌봄 담당자라는 여성의 사회구조적 위치가 결합하여 남성들에 비해 낮은 정치적 지식이나 경제적 지식을 갖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과의 구체적 효과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여성 집단의 경우 남성 집단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향후의 정치전망과 사회권의 인정 정도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 집단에서만 향후 정치 전망이 정부신뢰에 효과를 나타냈다는 의미는 결국 두 변수들에

10) 2011년에는 누락되었으나 2009년에는 포함된 문항은 피고용자들에게 “지난 몇 년간 임금 상승이나 승진이 있었느냐”는 질문이다. 이 문항의 분석 결과, 상용직 가운데 55.7%가 지난 3~4년 동안에 급여상승이나 승진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상용직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임을 알 수 있다.

서 모형에 투입된 나머지 변수들과의 공유된 부분들을 제거하고 난 나머지 부분들에서 상관성이 존재했다는 의미이다.¹¹⁾ 즉, 여성 집단에서 향후 정치전망이 그만큼 다른 변수들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어, 나머지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그것의 순수효과를 드러낼 만큼 효과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에 비해 향후 정치 전망 인식이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망적 판단이 현재의 인식이나 회고적 인식에 비해 더 주관적 인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만큼 여성들의 정부신뢰 판단에 주관성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여성 집단에서만 사회권의 효과가 나타난 현상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정부의 사회분배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고, 복지정책의 수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정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Edlund, 1999; Shepelak, 1989; 전성표, 2006)는 논의와 결부될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면서 양육이나 보살핌 노동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더 긴박하게 복지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또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더 많으므로 여성 집단에서만 복지권과 정부신뢰가 관계성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남성 집단의 경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라는 정치적 자유권의 보장이 정부신뢰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이선미, 2004)가 보여주듯이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의 정치참여가 더 활발하고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함과 동시에 남성들에게서 정치적 참여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본 연구 자료의 질문지에 있는 투표참여와 집단행동 참여 문항을 교차분석 및 t검증 한 결과, 두 경우 모두 성별 차이가 존재하며 남성들의 정치참여가 더 활발한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의 지방선거 참여를 교차분석 한 결과는 남성은 71.1%, 여성의 61.1%가 투표에 참여했고 성별에 따른 투표율의 차이는 유의미했다($\chi^2=14.793$, $df=1$, $p=.000$). 집단행동 참여 역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남자 평균

11) 다중회귀분석에서 각 독립변수들의 부분회귀계수는 나머지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부분상관계수와 동일하다.

8.85, 여자 평균 9.16. $t=-2.981, p=.000$).¹²⁾ 이러한 자료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정치참여가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성들의 활발한 정치참여의 기저에는 여성들과 구별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직업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행위자의 사회적 위치, 그와 연계된 평소의 정치 참여 활동이 정치적 참여권리에 대한 인식에서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다. 여성 집단에서만 교육과 정부신뢰 간에 부적 상관성($r=-.191$)이 존재하는 현상과 교육과 정당 지지의 관계가 여성 집단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공적 영역의 일차적 담당자인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의 경우, 정부와의 관계에 교육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여성 집단에서 교육과 정부신뢰가 부적 관계를 갖는 것은 민주주의가 공고하지 못한 한국사회의 경우 정부활동에 대한 지식의 증가는 정부신뢰가 아닌 정부불신을 야기하기 때문이다(박종민, 1995; 배귀희, 2011; 장수찬, 2002). 본 연구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남녀가 갖는 한국사회에서의 정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정부신뢰의 영향 요인들에 표상되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차이가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 요인 효과에서의 성별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정치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성에 대한 탐색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정부신뢰에 대해 남녀집단 모두에서 정치적 성과의 영향력이 경제적 성과의 영향력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각 변수들의 영향력에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성과의 상대적 중요성이 인과적 우선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정치적 효과의 상대적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변수들 간의 구체적 관계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앞에서 개진했던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대상이 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의 영향요인으로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사회심리적 요인, 경제적 성과를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경제적 성과변수를 외생변수로 선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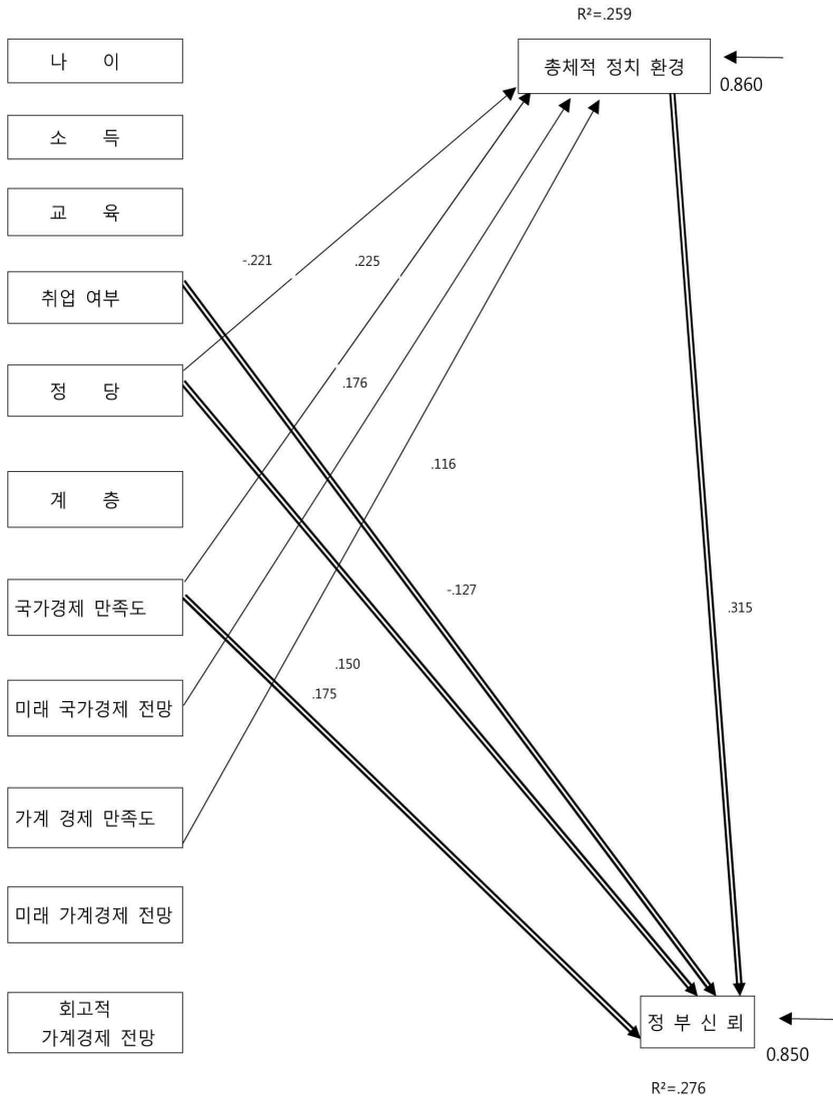
12) 이 변수는 집단행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내용의 4분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경험 혹은 참여 의사가 없는 것이다.

이유를 재차 명시하자면 17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한 가치 쟁점이 ‘경제 살리기’였고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한 선거 전략이 ‘경제 대통령’이었으므로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경제성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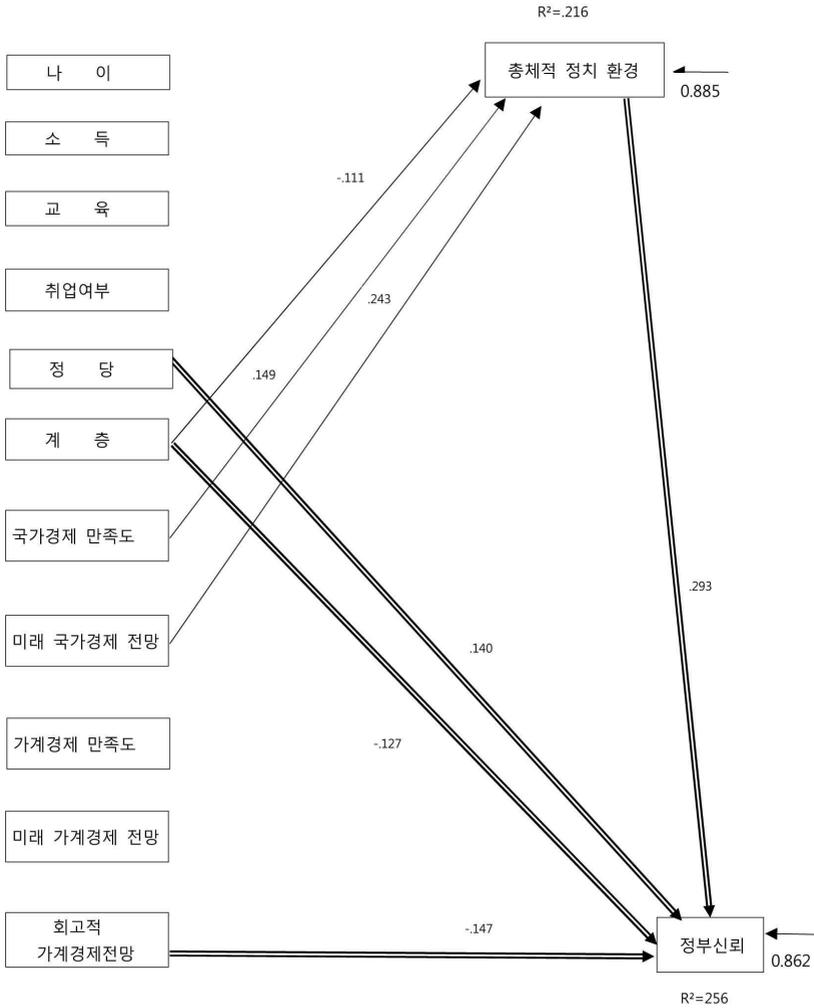
변수들 간의 인과연쇄를 탐색하고자 경로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에 포함되었던 정치적 성과 변수들을 모두 합산하여 “총체적 정치 환경인식”이라는 변수($\alpha = .832$)를 구성하였다.¹³⁾ 사회인구학적 변수, 사회심리적 변수, 경제적 성과 변수를 외생변수로, 총체적인 정치 환경인식 변수를 내생변수로, 정부신뢰를 최종 내생변수로 인과모형을 구성하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는 변수들 간의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 회귀계수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라 변수들 간의 인과적 경로를 성별로 제시하고 (<그림 1>, <그림 2>),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 간접적 효과와 총효과를 검토하였다.

13) 경로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매개변수를 하나로 설정할 필요가 있어서 다중회귀분석에 포함되었던 정치적 성과변수들을 모두 합산해 하나의 변수(매개변수)로 만들었다. 따라서 본 경로모형에서 검증되는 매개효과는 다중회귀 분석에 포함되었던 개별적인 정치적 성과변수들의 정확한 매개효과 검증은 될 수 없고, 정치적 성과 변수들의 대체적인 역할을 가늠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여기에서의 경로분석은 검증차원이 아닌 발견적 차원의 연구로서 한계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그림 1> 정부신뢰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인과경로(남성 집단)



<그림 2> 정부신뢰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인과경로(여성 집단)



본 연구에서 경로분석의 목적은 정치적 성과 변수가 경제적 성과변수와 정부 신뢰 간의 인과연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 성과변수→정부신뢰, 경제적 성과변수→정치적 성과변수, 정치적 성과변수→ 정부신뢰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과적 경로들을 살펴보고, 매

개효과가 유의한지 Sobel Test(1982)를 실시하였다. Sobel의 방정식은 $z\text{-value} = a \times b / \sqrt{b^2 \times SEa^2 + SEb^2}$ 인데 여기서 a는 독립변수→매개변수의 비표준화 계수, b는 매개변수→종속변수의 비표준화 계수, SEa는 경로 a의 표준오차, SEb는 경로 b의 표준오차를 의미한다. 이렇게 계산된 z-value가 ±1.96보다 크면 .05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이유진·정은정, 2013; Sobel, 1982).

외생변수들과 내생변수가 최종 내생변수인 정부신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성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남성들의 경우 총체적 정치 환경 인식, 국가경제 만족도, 선호정당, 취업여부 순서로 정부신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나타났다. 총체적 정치 환경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진보정당 지지자일수록 정부를 신뢰하지 못했고,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할 경우 정부를 신뢰하지 못했다. 이 추가분석의 목적은 4모형의 경제적 요인들에 대한 정치적 성과 요인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 성과→정치적 환경인식→정부신뢰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제적 성과 요인들을 중심으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국가경제 만족도의 경우 $z=3.721(p=.00)$, 국가경제 전망은 $z=2.882(p=.003)$ 로 총체적 정치 환경 변수의 국가경제 만족도와 국가경제 전망에 대한 매개효과는 유의했다. 남성 집단의 경우 국가경제 만족도라는 요인이 총체적인 정치 환경 인식에 영향을 주고, 정치 환경 인식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미래의 국가경제 전망 경우 4b1모형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경로모형에서 효과가 나타난 경우이다. 따라서 총체적인 정치 환경인식은 미래의 국가경제 전망과 정부신뢰의 유의한 관계를 억압한 억제변수에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¹⁴⁾가계경제 만족도의 경우 역시 총체적인 정치 환경인식에 영향을

14) X(독립변수)와 Y(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X와 Z(잠정변수), Z와 Y간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하면서 Z를 통제할 경우, X와 Y의 관계가 감소하거나 사라지면 Z는 매개변수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X와 Y의 관계가 아주 약하거나 무관계한데 Z를 통제할 경우, X와 Y의 관계가 높게 나타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관계성이 나타나는 경우 Z를 억제변수라고 한다(김경동·이은숙·김여진, 2009; 이익섭·이윤로, 2004).

미치고 이것이 다시 정부신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만 총체적인 정치 환경인식의 영향력을 특정한 검정요인 효과로서 언급할 정도로 분명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정당선호 z 값은 3.903($p=.000$), 취업여부 z 값은 -2.066($p=.039$)로서 이들 변수 역시 매개효과가 있다. 즉, 취업여부와 정당 선호는 정치적 성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여성들의 경우 총체적인 정치 환경인식→회고적 가계경제 전망→정당선호→계층의식의 순서로 직접적인 영향력이 나타났다. 총체적인 정치 환경에의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회고적인 가계전망이 긍정적일수록 정부신뢰가 낮아졌고, 진보정당을 선호할수록, 계층이 낮을수록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림 2>의 직접적 효과(경로)계수와 4b2모형의 β 계수를 비교해보면 정당선호와 계층의식의 효과는 감소하고 국가경제 만족도와 미래 국가경제 전망의 효과는 사라졌다. 반면에 존재하지 않았던 회고적 가계경제에 대한 효과가 생겨났다.

경제적 성과→총체적 정치 환경 인식→정부신뢰의 관계를 중심으로 매개변수의 효과를 짚어보면 국가경제 만족도의 z 값은 2.655($p=.007$), 국가경제 전망의 z 값은 3.827($p=.000$)로 여성 집단에서도 국가경제 만족도와 미래 국가 경제 전망의 인식 모두 매개효과가 존재하는데 남성 집단과 달리 미래 국가 경제 전망 인식의 매개 효과가 더 컸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좀 더 주관적 평가임을 보여준다. 계층의식은 $z=-1.94$ ($p=.051$)로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의 직접적 경로계수와 4b2 모형의 β 계수를 비교해보면 계층의식의 효과는 감소하고 국가경제 만족도와 미래 국가경제 전망, 정당선호 효과는 사라졌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았던 회고적 가계경제의 효과가 생겨났다. 회고적 가계경제의 경우 총체적인 정치 환경인식과 관계성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정부신뢰에 대해 직접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4b2 모형에서 회고적 가계경제 전망의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총체적 정치 환경 인식 변수가 도입됨으로써 정부신뢰에 효과를 드러냈다는 것은 총체적 정치 환경 변수가 억제변수에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총체적인 정치적 인식에 따라 회고적 가계경제 판단이 달라지고 이것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앞의 본문에서 교육수준과 보수 정당 선호자인 여성들의 경우 회고적 가계상태 인

식이 정부신뢰에 효과를 드러낸다는 점을 살펴본 바 있다.

본 연구는 경로분석을 통해 남녀 집단 모두에서 총체적인 정치 환경 인식이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총체적 정치 환경 인식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경제적 성과 요인이 정부신뢰에 다른 정도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정치적 환경 인식이 경제적 성과와 정부신뢰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여, 그에 따라 정부신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제적 성과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정치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보다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V. 요약 및 맺음말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 요인들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부신뢰에 대한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고, 경제적 성과에 비해 정치적 성과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 변수와 정치적 성과 변수의 하위변수들이 정부신뢰에 대해 갖는 효과에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하고,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인과적 경로에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정부신뢰 관련 연구에서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은 영향 요인들 사이의 구체적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거나, 효과의 방향성이 성별에 따라 상충되면서 결과적으로 성별 효과의 차별성이 상쇄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구체적 발견들과 논의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남성 집단은 경제적 성과 중 국가경제에 대한 만족만이 정적인 효과를 드러냈음에 비해 여성 집단은 가계경제에 대한 회고적 인식만이 정부신뢰에 부적인 효과를 드러냈다. 남성 집단의 경우 가계경제에 대한 인식보다 국가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각이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지지에 더 중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시원, 1994; 심재철, 2005)이 수용되었다. 여성 집단의 경우 자기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대통령이나 집권당에의 지지를 결정한다는 논리에 의거한 결

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들(Kinder and Kiewie, 1981, 이시원, 1994에서 재인용; 김왕식, 2011)과는 달리 회고적 가계상태 인식이 좋지 않을수록, 즉 가계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인식할수록, 현재의 정부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여성들의 평가에는 인지적 왜곡이 개입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그 저변에 여성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과 사적 영역의 일차적인 담당자로서 주로 가사와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사회구조적 위치가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 보았다.

둘째, 정부신뢰에 대한 정치적 성과의 효과에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했다. 여성 집단의 경우 공공기관 인권보장과 정치상황 만족도에 이어 향후의 정치전망과 사회권 인정 정도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남성 집단의 경우 공공기관 인권보장, 정치상황 만족도에 이어 정치적 자유권이 효과를 드러냈다. 정치상황 만족도 변수와 다른 변수들의 상관성은 남성 집단이 강한데 비해 향후 정치 전망 변수와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성은 여성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여성 집단에서만 향후 정치 전망이 효과를 나타낸 것은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낙관적 정치 전망—향후 대통령의 국정 조정 능력에 대한 기대—이 다른 변수들과 더 많이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정부신뢰에 대해 순수 효과를 드러낼 만큼 파급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권 효과의 성별 차이는 정부신뢰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상이한 사회권 요구가 존재하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정부신뢰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성 집단의 경우 정치적 자유권의 보장이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남성들이 그만큼 정치적 자유권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남성들의 정치참여가 더 활발하고 일상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부신뢰 영향요인들의 효과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는 남녀가 차지하는 사회경제적·정치적 위치에서의 차이가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요인들과 그 효과에서의 성별 차이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 남녀집단 모두에서 경제적 성과보다는 정치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더 많은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성과보다 정치적 성과가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들(Mishler and Rose, 1997;

Hofferbert and Klingemann, 1999; 박종민, 1991)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집권에 경제적 성과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는 논의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 먼저, 집권 이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식에 대한 이의로부터 국민들의 정부평가에의 기준이 변화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는 선행연구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요인이나 국정의 통합과 안정 같은 정치적 요인들을 간과함으로써 경제적 성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과 정치상황 만족도가 대등하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난 것은 한국사회 성원들 사이에서 기본적인 민주적 제도의 보장과 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에 기반을 둔 국정안정이라는 상이한 두 요구가 서로 필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대한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의 구체적 관계성을 탐색하기 위해 추가적 분석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남녀 집단 모두에서 국가 경제 만족도와 미래 국가경제 전망 변수의 매개효과가 존재했다. 총체적 정치 환경 인식이 매개변수라는 것은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에서 경제적 성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성과와 정부신뢰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정치적 성과에 따라 정부신뢰가 달라진다는 의미로서 정치적 성과가 보다 중요한 설명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인과적 경로에서도 성별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정부신뢰 영향 요인들에서의 성별 차이가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의 차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의 기저에는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에 따라 여성이 사적 영역의 일차적인 담당자가 되는 사회구조적 상황, 그에 결부된 정치적 참여나 활동과정에서의 성별 차이가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젠더에 따라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한 상이성이 정부신뢰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과 효과에서의 성별 차이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정부신뢰 연구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원택, 2008.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이슈: 회고적 평가 혹은 전망적 기대?” 《의정연구》 25: 31-59.
- 권혁용·정한울, 2009. “경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의 경제투표”, 김민전·이내영 공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3》, 서울: 동아시아 연구원
- 금현섭·백승주, 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4): 201-228.
- 김경동·이은죽·김여진, 2009. 《사회조사연구방법: 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박영사
- 김배원, 2013.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론적 검토”, 《헌법학연구》 19(1): 47-74.
- 김병규·이근수, 2009,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1(3): 893-914.
- 김왕식, 2011,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접근방법과 제도적 성과 접근방법의 검증”, 《사회과학연구》 27(2): 141-160.
- 김용복, 2008. “2007년도 대통령선거 결과분석: 요인과 평가” 《동북아연구》 13: 87-105.
- 김지희. 2006. “한국인의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와 불신: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뢰연구》 16(1.2): 49-80.
- 김태근, 2006. 《U-Can 회귀분석》, 인간과 복지
- 문우진, 2012,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 누가 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바꾸는가?”, 《한국정치학회보》 46(1): 175-201.
- 박영선, 2010, “자율성, 대화, 지원과 협력의 측면에서 바라본 이명박정부와 시민사회 관계”, 《시민사회와 NGO》 8: 55-89.
- 박종민, 1991, “정부신출이 정부신뢰에 주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25(1): 291-305.
- 박종민·김왕식. 2006.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2): 149-170.
- 박종민·배정현, 2007, “정부신뢰와 정책해택 및 정부공정성에 대한 태도”, 한국행정학회 2007년도 동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上)>, 495-511.
- 박종민·배정현, 2011.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17(2): 117-142.
- 박희봉·이희창, 2005, “개인의 가치가 정부신뢰와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중,일 3국의 시민의식 비교”. 《한국행정연구》, 14(4): 3-38.

- 박희봉·이희창. 2006, “사회자본과 양성평등: 사회자본의 서열 특성과 양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회보》 10(4): 91-116.
-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43(4): 105-128.
- 배귀희·임승후, 2009,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정책선호 및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18(4): 61-92.
- 배정현, 2011, 《아시아에서의 정부신뢰의 근원-다수준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손호중·채원호, 2005, 《한국행정학보》, 39(3): 87-113.
- 심재철, 2005, “경제뉴스의 현실점검과 비대인적 효과”, 《시장자본주의와 경제저널리즘》, 삼성언론재단
- 양건모. 2007. “정부신뢰 개념의 이론적 논의 및 타당성 검증”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 어수영, 2004, “가치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1990-2001년 간의 변화 비교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8(1): 193-214.
- 오경민·박홍식. 2002, 《한국정책과학회보》, 11(3): 113-135.
- 유홍준·홍훈식. 2009, "집단참여가 사적·공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 42(55): 55-77.
- 이강로, 2010.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정운영 비교: 임기 초 지도력 특성과 국민지지” 《대한정치학회보》 18(1): 49-74.
- 이곤수, 2009.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의 영향요인 분석: 취임1년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7(3): 105-137.
- 이상훈, 2005. 《大統領 支持率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관한 연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례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미, 2004, “여성의 시민참여와 사회자본: 자원결사체 참여의 성별 분리”, 《한국여성학》, 20: 163-193.
- 이성구·연영모, 2009, 《21세기 정치학》, 대경
- 이수인, 2010.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의 관계와 성별차이에 대한 연구: 민주화를 향한 기대와 사회적 관심 및 정보의 매개 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4(4): 162-203.
- 이수인, 2012. “소득 분배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동향과전망》, 86: 239-288.
- 이승중, 2010. “정부신뢰에 대한 종교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4(1): 99-119.

- 이시원, 1994, “경제적 상황요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3: 61-84.
- 이완수·심재철, 2007. “집합적 경제보도와 국가적 경제상황 및 국민적 경제인식이 대통령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계열 분석” 《한국방송학보》 21(2): 506-545.
- 이익섭·이운로, 2004. 《사회복지 조사방법의 이해》, 학지사
- 이유진·정은정, 2013. “학령전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모의 양육태도와 학령전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231-249.
- 이재철, 2008. “17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경제투표: 유권자의 경제적 인식과 투표결정”, 《현대정치연구》, 1(1): 111-136.
- 이종수, 2001,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 요인.” 《사회과학논집》, 32: 67-86.
- 이현우, 1998. “한국에서의 경제투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97~150, 서울: 나남.
- 이후종, 2009. 《한국 대통령의 지지도와 요인분석: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우·권혁용, 2008,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동아시아 연구원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한국정치학회보》 36(1): 87-112.
- 전성표, 2006. 「배분적 정의, 과정적 정의 및 인간관계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들의 공평성 인식과 평등의식」, 《한국사회학》 40(6): 92-127.
- 정환울, 2007, “한국에서 경제투표는 가능한가”, 이내영·이현우·김장수 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동아시아연구원, 223-255.
- 조한상, 2009,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줄기』, 도서출판 범한
- 주병철, 2011, 《정부 경제정책 기사에 대한 프레임 연구: 1998년 이후 정권별 비교 분석》 경희대학교 언론정보 대학원 석사 논문
- 차강진, 2008, 《제 7판 헌법강의》, 청출어람
- 최장집, 2010,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의 논평” 《경제와사회》 85: 93-120.
- 한귀영, 2011, 《대통령의 정책 아젠다와 대통령 지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참여정부 및 이명박정부 초반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Abramson, P. R. 1983. *Political Attitudes in America: Foundation and Change*. San Francisco, CA: Freeman.
- Almond, Gabriel A. and Verba, Sidney,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rber, B.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rehm, J., & Rahn, W.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1023.
- Butler, John K. Jr. 1991, "Towards Understanding and Measuring Conditions of Trust: Evolution of a Conditions of Trust Inventory." *Journal of Management*, 17: 643-663.
- Christensen, Tom, and Per Lægreid. 2005. "Trust in Government: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rvice satisfaction, political factors, and demography."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8(4): 487-511.
- Citrin, Jack, 1974, "Comment: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73-988.
- Citrin, Jack and Green, Donald P. 1986.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Resurgence of Trust in Governm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 431-453.
- Edlund, Jonas. 1999. "Trust in Government and Welfare Regimes: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nd Financial Cheating in the USA and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5(3): 341-370.
- Espinal, Rosarin, Hartlyn, Jonathan and Kelly, 2006, "Performance Still Matters Explaining Trust in Government in the Dominican Republic."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9(2), 200-223.
- Feldman, S. 1982. "Economic Self-Interest and Political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6(2): 446-466.
- Fukuyama, Francis, 1999.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구승희 역, 1996,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한국경제신문사
- Hardin, Russell. 1990. "Trusting Persons, Trusting Institutions." in Richard J. Zecjhauser ed., *Strategy and Choice*, 185-209, Cambridge: The MIT Press.
- Hetherington, M.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Hibbing, John R. and Theiss-Morse, Elizabeth., 2001. "Process Preferences and Dislike: What the People Want Government to B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 145-153.
- Hofferbert, R. I., and Klingemann, H. D. 1999. "Remembering the Bad Old Days: Human Rights, Economic Conditions, and Democratic Performance in Transitional Regim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6(2), 155-174.

-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 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coby, W. 1994. "Public Attitudes toward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2): 336-361.
- Jacoby, W. 2000. "Issue Framing and Public Opinion on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4(4): 750-767.
- Kasse, Max, 1999. "Interpersonal Trust, Political Trust and Non-institutionaliz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22(3): 1-21.
- Kinder, Donald R., and D. Roderick Kiewiet. 1979. "Economic Discontent and Political Behavior: The Role of Personal Grievances and Collective Economic Judgments in Congressional Vot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2): 495-527.
- Kinder, D. R. and Kiewiet, D. R. 1981. "Sociotropic Politics: The American Ca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 129-141.
- Levi, M. 1996. "Social and Unsocial Capital." *Politics and Society*. 24: 45-55.
- Lewis-Beck, M. S. (1988). *Economics and Elections: The Major Western Democracie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in, Nan. 2000. "Inequality in Social Capital." *Contemporary Sociology* 29(6): 785-795.
- Mayer, R.C., Davis, J.H. and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 Mayoux, Linda. 2001. "Tackling the Downside: Social Capital, Women's Empowerment and Micro-Finance in Cameroon." *Development and Change*, 32(3), 435-464.
- McAllister, I. 1999. "The Economic Performance of Governments" In P. Norris 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er, A.H.,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951-972.
- Mishler, W., and Rose, R. 1997. "Trust, Distrust and Skepticism: Popular Evaluations of Civil and Political Institutions in Post-Communist Societies." *The Journal of Politics*, 59(2), 418-451.
- Mishler, W. and Rose, R., 2001. "What are the Origin of Political Trust?: Testing Institutional and Cultural Theories in Post Communist Socie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1): 30-62.

- Newton, K. 2006. "Political Suppor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Political and Economic Performance," *Political Studies*, 54: 846-864.
- Newton, K. 2008. "Trust and Politics." In D. Castiglione, J. W. v. Deth and G. Wolleb eds.,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ye, Jr. J. S. 1997. "In Government We Don't Trust." *Foreign Policy* 108: 99-111.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Rothstein Bo. 2001. "Social Capital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Politics and Society*. 29(2): 207-241.
- Shepelak, N. J. 1989, "Ideological Stratification: American Beliefs about Economic Justice." *Social Justice Research* 3: 217-231
- Sobel, Michael E.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tolle, D. 2001. "Clubs and Congregations: the Benefits of Joining an Association." In K. Cook ed., *Trust in Society*, NY: Russell Sage Foundation.
- Stolle, D., and Hooghe, M. 2003. *Generating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lgrave Macmillan.